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4
----------	-----

발의연월일 : 2025. 1. 24.

발 의 자 : 박윤옥, 이경숙, 한송연,
전혜연, 김현택, 감지훈(민),
이수련, 김동훈, 박경원,
한근수, 정현미, 이진환

1. 제안 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안 제3조~제5조)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6조,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 의견청취 등, 수당 및 여비(안 제12조, 안 제13조)
-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및 포상(안 제14조~제1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생이용할 것
5.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6.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집행계획을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

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민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여비는 최대 750천원 예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산출 내역(추정) : 총 750천원(7명×100천원, 1명×50천원)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석여비(2025년도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

편성기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위원 참석여비	
➡ 위원회 참석수당(일당) - 기본료 : 100천원 / 2시간 - 초 과 : 50천원 사이버위원회 등 참석수당(일당) - 기본료 : 50천원 / 시간 - 초 과 : 20천원 ※ 서면회의는 기본료만 지급	➡ 위원회 참석여비(일당) - 일비(일당) : 25천원 - 식비(일당) : 25천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제1호 적용	

○ 교육 및 홍보, 제정지원, 포상 비용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지원대
상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예산산정이 어려워 예산 추계 미반영

4.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남경화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